

中 “디플레이션 없다” 강조… 금리인하 기대감 ‘솔솔’

● 차이나 뉴스&리포트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보다 ↓
생산자물가지수 반년째 하락세
“물가 미미한 변동 주목 할 것”

중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을 암시하면서다.

17일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실시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 유동성이 과도한 수준으로 흘러넘치게 않게 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가 더 적극적인 통화완화를 시사한다며 다음달 지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한 근로자가 옷가게 창문 진열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은 4월 소매 판매와 기타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한 후 소비와 수출 수요의 압박에 직면했다고 화요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AP·뉴스시

급준비율을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동성 공급이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용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논쟁을 촉발한 것은 물가지수다. 작년 4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등 지급준비율 인하

로 유동성 공급이 이어졌지만 물가는 오히려 내렸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쳐 전월(+1%)보다 낮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반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2월 -1.4%, 3월 -2.5%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경제 지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4.7%에 그쳐 시장 예상치에 모두 못 미쳤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단 중국당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며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분기에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번엔 “물가의 미미한 변동”에 주목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곳도 나왔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완화 입장은 고수했지만 지급준비율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뿐 정책금리 등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씨티그룹은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2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초기 리오픈(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약해졌다”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향후 통화정책에서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금리 결정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목표지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확산… 韓 이익되는 정책 방향 마련

산업부-대한商議, ‘CFE 포럼’ 출범
민간기업·다수의 전문가 등 참여
연내 인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

을 가졌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해당 CFE 포럼을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한 주요 기업 및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지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에

서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준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충북, 1주일만에 10곳서 ‘구제역’ “국내 백신으로 방어 가능 할 것”

농식품부 방역관리 총력
해외 유입… 백신접종 미흡 확산
염소 농장 1곳에서도 첫 발생

충북 청주한우농장 등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이 첫 발생 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긴급백신접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이달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 등 총 10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를 보

면, 이번 해외 유입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이달 10일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 2주의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백신접종을 완료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가축 방역 상황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시

기 발생지인 청주와 증평, 인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농가에는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고,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긴급접종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한다.

구제역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 지역의 긴급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 중이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 약 11만호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체 검사를 5월 22일~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또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6일까지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